

#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서

2024.7.30.

##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백지화 네트워크

기후위기비상행동,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 탈핵시민행동

기후정의 실현·탈석탄·탈송전탑·탈핵운동 시민사회단체 연대체들로 구성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백지화 네트워크』는 5월 31일 발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위원회 실무안(11차 전력계획 실무안)'과 7월 10일 발표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며, 이미 제출된 '11차 전력계획 실무안'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 1. 근거자료 제시 없이 급격히 수요 전망 증가, 동어반복적 표현에 그친 전략환경영향평가

■ 급증한 10차 전력계획 기준 수요, 그보다 더 급증한 11차 실무안. 하지만 근거는 명시되지 않음.

— 2023년 1월 발표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36년 전력수요(하계)를 모형 수요 125.2GW, 전기화·데이터센터 수요 10.5GW(기준수요 : 135.7GW)로 전망한 바 있다.

— 반면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12.)'은 2034년 기준 수요를 117.5 GW로 전망했다.

— 9차와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기준수요 차이(2034년, 2036년)는 18.2GW(15.5% 증가)에 이른다.

— 9차와 10차 전력계획의 발표 시기와 전망 시기가 2년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음을 고려할 때, 수요 예측이 급격히 증가했다.

— 그런데 '11차 전력계획 실무안'은 2038년 모형 수요와 추가 수요(전기화·데이터센터)를 각각 128.9GW와 16.7GW로 전망했다. (기준수요 : 145.6GW)

— 이는 10차 전력계획의 2034년 기준 수요보다 7.3%나 증가한 것이다.

—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의 연평균 전력수요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 우리나라 연평균 전력수요 증가율은 2002~2009년 5.5%, 2010~2019년 2.66%였으며, 2020~2023년 연평균 전력수요 증가율은 1.66%였다.

— 이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 에너지 효율 향상, 인구 감소 등에 따른 것으로 향

후 전기화와 데이터센터 증가를 고려하더라도 '11차 전력계획 실무안'의 증가율은 지나친 것이다.

— 특히 '11차 전력계획 실무안'은 불과 1년 6개월 전에 발표한 '10차 전력계획'과 큰 전력수요 전망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도 '계획의 적절성·지속성 - 수요 공급 규모의 적절성' 항목에서 "기업추산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모형 등을 활용하여 산정(143p)"했다는 내용만 언급할 뿐, 이에 따라 향후 전기차 보급, 히트펌프, 산업 전력화, 데이터센터 등 세부 항목에 따른 수요 전망을 적시하지 않고 있으며, 예측의 적절성에서도 별도 판단 근거 제시 없이 "전력수요를 과학적으로 전망한바, 수요 전망이 적절하게 이뤄진 것으로 평가(145p)"한다는 등의 반복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전력수요 전망 중 추가 수요' 부분(143p)>

2) 추가수요

-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향후 투자 확대가 예상되는 반도체 산업, AI의 확산으로 증가가 예상되는 데이터센터, 전기화 수요 등 계량모형이 예측한 추세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력수요를 합산하여 '38년 16.7GW의 전력수요를 추가로 반영(기업추산자료, 한전 전기사용 신청 건, 에너지경제연구원 모형 등을 활용하여 산정)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수요·공급 규모의 적절성' 부분(145p)>

다. 수요·공급 규모의 적정성

-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38년 목표수요는 129.3GW로 전망되었으며, 목표수요와 예비율을 고려한 목표설비는 157.8GW로 확정설비(147.2GW)를 차감한 신규 필요설비는 10.6GW로 산정
- 경제성장, 기온상승 등 거시변수 변화를 반영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 투자, AI 확산에 따른 데이터센터 확대, 탄소중립을 위한 전기화 영향 등을 포함하여 전력수요를 과학적으로 전망한 바, 수요전망이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
- 전력수요 확대 전망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준 설비예비율 산정, 신규 필요설비 도출 등의 과정을 거쳐 적정 수준의 발전설비 계획을 도출한 것으로 판단

— 전력계획에서 기준수요 예측은 이후 발전설비 계획의 근거로 사용되기에 수요 전망에 사용된 데이터와 모델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적절성 평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 2. 아전인수식 유엔기후변화협약 전지구적 이행점검(GST) 해석, 불명확한 탈화석연료 목표

### ■ 태양광과 풍력만 재생에너지? 아전인수식 2030년 재생에너지 3배 설명.

— 2023년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8차 당사국 총회(COP28)는 전지구적 이행점검(GST) 결정문(FCCC/PA/CMA/2023/L.17)을 통해 “2030년까지 전 세계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 늘리고, 전 세계 연평균 에너지 효율 개선율을 2배(Tripling renewable energy capacity globally and doubling the global average annual rate of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s by 2030)” 올리는 내용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 이에 ‘11차 전력계획 실무안’은 “태양광·풍력 설비용량은 ‘22년 23GW에서 ‘30년 72GW로 확대되어, COP28에서 합의된 재생에너지 3배 확대 목표를 달성할 전망(실무안 보도 자료 4p)”이라고 밝혔다.

— 하지만 이는 태양광과 풍력만을 계산한 값이며,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와 전혀 다른 해석이다.

—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이 발표한 ‘2022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은 32.5GW이다. - 태양광(24.3GW), 바이오(3.7GW), 풍력(1.9GW), 수력(1.8GW), 폐기물(0.5GW), 해양(0.3GW)

— 이를 3배 하면 97.5GW로 ‘11차 전력계획 실무안’의 설명과 큰 차이를 보인다.

— 평소에는 재생에너지 이외에도 석탄액화가스나 천연가스 개질 수소를 이용한 수소연료전지 등 신에너지를 합해 신·재생에너지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마치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것처럼 설명하다가 국제사회에서 우리 정부가 합의한 ‘재생에너지 설비 3배 약속’에 대해서는 태양광과 풍력만 계산하는 아전인수식 해석에 불과하다.

— 또한 COP28의 GST에서 다른 것은 전 세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경제 규모 10위권, 선진국이자 20여 년째 OECD 30여 개국 중 재생에너지 발전량 꼴찌 수준을 차지하는 한국 상황을 고려하면 실제 3배 이상의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증대가 있어야 할 것이다.

### ■ 에너지 효율 개선 2배는 아예 언급 없어

— 아울러 재생에너지 용량 3배와 함께 언급된 에너지 효율 개선율 2배의 경우,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수요관리’ 부분의 주요 항목임에도 관련 언급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이는 ‘11차 전력계획 실무안’이 COP28 GST 내용을 전체적으로 담고 있지 않으며, 매우 선택적으로만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 G7의 2035년 탈석탄 선언, 우리나라는 목표조차 없어

- 또 COP28에서 채택된 GST에서는 “정의롭고 질서 있으며, 공평한 방식으로 에너지시스템을 화석연료에서 전환하고, 이 중요한 10년 동안 행동을 가속하여 과학에 따라 2050년까지 순배출 제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Transitioning away from fossil fuels in energy systems, in a just, orderly and equitable manner, accelerating action in this critical decade, so as to achieve net zero by 2050 in keeping with the science)”라고 명시하고 있다.
- 이는 과거 탈석탄 중심으로 논의되던 온실가스 감축 논의를 화석연료 전체로 확대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되 기후위기 심화에 따라 향후 10년을 중요한 분기점으로 삼아 탈화석연료 정책을 가속해야 함을 의미한다.
- 이에 2024년 4월, G7 에너지·환경·기후장관 회의는 ‘2030년대 상반기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 막연한 선언이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 시점을 정하고 그에 맞춘 정책추진을 통해 탈화석연료 행동을 가속하는 방안을 결정한 것이다.
- 그러나 11차 전력계획 실무안에는 석탄화력발전 폐지의 목표 연도가 명기되어 있지 않으며, 노후 석탄발전소를 또 다른 화석연료 발전소인 LNG 발전소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그럼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2030년 신규 NDC 배출 목표(전환부문 145.9백만톤) 달성 방안을 제시하였으므로 국제환경협약·규범과 부합(129p)”한다고 밝히고 있다.
- 그러나 국제환경규약·규범으로 1992년 채택된 ‘유엔기후변화협약’과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만을 고려한 것으로 기후변화협약의 최근 동향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 이는 탄소중립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행 성과를 평가하고, 국제협상의 동향과 주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분석하여 면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는 국제협상 동향 분석에 따른 대책 마련 의무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

#### ■ 온실가스 배출원인 암모니아·수소 혼소 확대

- 또한 석탄과 LNG 발전의 대안으로 암모니아와 수소 혼소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잡고 있다.
- 현재 추진 중인 암모니아·수소 혼소 계획은 대부분 기존 화석연료에 의존한 것으로 2023년 4월 확정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도 2030년 수소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8.4백만 톤으로 잡혀 있다.
- 그럼에도 혼소를 통해 기존 화석연료 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은 또 다른 온실가스 배출 증가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

### 3. 국민 안전 위협·핵폐기물 대책 없는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신규 핵발전소 건설계획

#### ■ 노후 핵발전소 14기 수명연장, 그중 9기는 2번 수명연장

- ‘11차 전력계획 실무안’은 현재 가동 중인 핵발전소 모두를 2038년에도 운전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현재 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은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따라서 2038년까지 수명이 만료되는 14기(고리 2·3·4, 한빛 1·2·3·4, 월성 2·3·4, 한울 1·2·3·4) 모두를 수명 연장하고 이 중 9기는 1차 수명연장(10년)에 이어 2차 수명연장까지 총 20년 수명연장을 하게 된다.

<11차 전력계획 실무안에 따라 수명연장 되는 핵발전소>

발전소명	운영허가 만료 연도	2038년 가동 시 수명연장 횟수
고리2	2023	2
고리3	2024	2
고리4	2025	2
한빛1	2025	2
한빛2	2026	2
월성2	2026	2
월성3	2027	2
한울1	2027	2
한울2	2028	2
월성4	2029	1
한빛3	2034	1
한빛4	2035	1
한울1	2037	1
한울2	2038	1

- 노후핵발전소는 과거 기술기준에 따라 건설되었기에 일부 설비 보강 등을 하더라도 한계가 있으며, 설비 노후에 따라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또한 설계수명 40년으로 건설된 핵발전소를 10년씩 2번, 20년 수명연장 하는 것에 대한 핵발전소 소재지와 인근 지역주민들의 우려는 매우 크다.
- 또한 최근 확인된 핵발전소 격납건물 철판(CLP) 부식 사건이나 격납건물 콘크리트 공극 사건에서 드러나듯 핵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설계 변경과 공기 단축을 위해 부실시공이 이뤄지기도 했으며, 각 발전소의 운전 이력이 모두 달라서 이들 발전소의 안전성은 일률적이지 않다.
- 따라서 원자력안전법은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에 관한 규정을 발전소별로 진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부합하지 않으면 해당 발전소는 폐쇄될 수밖에 없다.
- 그럼에도 ‘11차 전력계획 실무안’은 노후핵발전소 안전성 심사 등이 끝나지도 않은 상

황에서 모든 노후핵발전소가 안전하다는 그것을 전제로 전력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는 핵발전소 안전성뿐만 아니라 전력계획이 목표로 하는 안정적인 전력공급 측면에서도 적절치 않다.

■ 2038년까지 신규 핵발전소 최대 3기 건설

- 또한 '11차 전력계획 실무안'은 현재 건설 중인 새울 3,4호기(신고리 5,6호기)와 신한울 3,4호기, 그리고 최대 3기의 대형 핵발전소를 신규 건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명박 정부 당시 영덕과 삼척에 신규 핵발전소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이들 지역에 부지를 선정하였으나, 두 지역 모두 주민투표(삼척 2014년, 영덕 2015년)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핵발전소 반대 의사를 확인하고 계획이 백지화된 바 있다.
-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정부는 수차례 신규 핵발전소 부지 선정을 추진했으나,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신규 핵발전소 부지 선정에 모두 실패한 바 있다.
- 이는 핵발전소의 사고 위험성 이외에도 일상적으로 배출되는 액체·기체 핵폐기물, 대규모 송전선로, 온배수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지역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해 왔으며,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을 선정해 신규 핵발전소 부지 선정을 추진하는 지역 불평등을 초래하여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힌 것이다.
- 그럼에도 '11차 전력계획 실무안'은 "(신규 핵발전소의) 건설 기수는 부지확보 등 추진 일정, 소요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가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최적안을 도출할 것을 권고하였다(보도자료 5p)"라고 밝히고 있다.
- 그동안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고려할 때, 이는 정부가 사업자(한수원)와 협의해서 될 문제가 아님은 너무나 자명하다.
- 그럼에도 '11차 전력계획 실무안'은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자의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대규모 사회적 갈등과 안일한 전력계획 수립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 특히 '11차 전력계획 실무안'과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노후핵발전소 14기 수명연장과 건설 중 핵발전소 4기, 신규 핵발전소 3기 등이 동시에 가동될 경우, 나을 고준위핵폐기물 대책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 기존 핵발전소 내부에 건설된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고는 2030년 한빛 핵발전소를 시작으로 핵발전소별로 단계적으로 포화될 예정이다.
-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진행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는 파행으로 끝났으며, 21대 국회에서 논의되던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기존 핵발전소 부지가 사실상 핵폐기장 부지화되는 것을 우려하는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폐기되었다.
- 이런 상황에서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과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계속하여 처리 불가능한 고준위핵폐기물을 계속 양산하는 것은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제약하고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일이 될 것이다.

#### 4. 설계조차 끝나지 않은 SMR(소형모듈형원자로) 안전성·실효성 검토 필요

- '11차 전력계획 실무안'은 2034~2035년에 현재 개발 중인 소형모듈형원자로(SMR)를 상용화 실증을 위해 할당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이는 현재 한수원이 추진 중인 혁신형 SMR(i-SMR) 실증을 위한 것으로 170MW짜리 4기를 건설하는 내용이다.
- 하지만 i-SMR은 아직 설계도 끝나지 않아 개념만 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 한수원은 2028년 원안위로부터 표준설계인가를 마치고 이후 건설 계획을 갖고 있지만, 정작 이를 심사해야 할 원안위는 2024년 6월에야 '소형모듈원자로 규제연구 추진단' 출범식을 가졌다.
- 새로 설계되는 원자로의 안전성을 모든 설계가 끝난 이후 심사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 또 이 과정에서 설계나 심사가 지연되는 것 역시 일상다반사이다.
- 아직 설계가 끝나지 않은 발전소를 전력계획에 반영한 예는 이번이 처음이며, 이는 즉속적인 안전성 심사를 전제로 하거나 설계·심사 일정에 따라 건설 지연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 2년마다 한 번씩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수립된다는 점에서 SMR의 전력계획 반영은 너무나 선부르며,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 특히 SMR은 안전성뿐만 아니라 경제성 문제 또한 검증되지 않았으며, 신규 부지 확보, 핵폐기물 보관 및 이송 문제 등이 대형 핵발전소의 문제를 고스란히 안고 있다. 따라서 **11차 전력계획에서 SMR 상용화 실증사업은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 5. 담대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공공부문 재생에너지 확대 필요

- 2021년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한 NDC 상향 안에서 2030년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30.2%였다. 하지만 10차 전력계획에서 이는 21.6%로 하향되었고, '11차 전력계획 실무안'에서는 이 수치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 앞서 언급한 '2030년까지 전 세계 재생에너지 3배' 과제를 달성하려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최소한 지금의 5배(164.9GW) 수준으로 늘어야 한다.
-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력계획 상 목표치로만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석탄, LNG, 핵발전 같은 전통적인 발전원처럼 구체적인 계획으로 접근해야 한다.

- 전통적 발전원은 발전 용량, 건설 시기, 발전소 위치 등이 담긴 발전사업자의 건설 의향서를 기반으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지만, 재생에너지는 대략적인 흐름만을 갖고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 이를 위해서는 민간사업자들에게만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을 맡겨둘 것이 아니라, 공기업, 지자체 등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발전사업에 진출하여 예측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전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 기존 발전공기업의 경우, 현재 운영 중인 화석연료 발전소 대부분을 운영하고 있기에 탈화석연료 과정에서 공기업의 역할과 일자리 감소 등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 재생에너지 전환 속도를 높이고 불확실성을 줄이며, 정의로운 전환 실현을 위해 11차 전력계획에 공공부문 재생에너지 비중을 명시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입법 과제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6. 수도권 전력수요·송전망 포화상태, 설비 적정성·전력망 문제 고려해야

- 최근 전력 부문의 큰 쟁점 중 하나는 수도권 집중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 송전망 포화 문제이다.
- 2023년 1월, 한전은 고양시 킨텍스 제3전시장(20MW)과 CJ 라이프시티 부지(11MW)에 전력공급 유예 통보를 진행한 바 있다.
- 강릉·삼척 지역의 경우, 안인 화력, 블루파워, 삼척 빛드림 등 화력발전소에 대한 발전정지 통보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모두 수도권 전력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발전소는 비수도권 지역에 밀집되어 있으며 이를 연결할 송전선로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들이다.
- 전력계획 수립의 목표로 잡은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서는 단지 발전소만 건설해서는 안 된다. 전력 생산과 공급을 연결해야 하며, 발전소 건설계획을 통해 생산을 관리하듯 전력수요도 관리하여야 한다. 즉 전력의 수요와 공급, 생산과 소비 지역이 일치해야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하다.
- 하지만 지금까지 전력계획은 발전소 건설계획을 중심으로 수립되고 이들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송·변전 할 계획을 사후적으로 수립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또 전력수요에 대해서는 일부 절전을 위한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정도에만 머물고 '전력 공급의무'를 중심으로 관리되었다.
- 지금의 수도권 전력 문제는 이런 기존 방식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증거이다. 그동안 정부의 송·변전 계획을 인근 지역주민들의 희생에 기반하여 추진됐고, 이는 밀양 주민들의 송전탑 투쟁을 통해 충분히 드러났다.

- 그럼에도 전력계획 수립 절차는 여전히 바뀌지 않았고, 이제 전력공급 중단 사태로 나타나고 있다.
- 다른 한편으로 송전망 문제는 재생에너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 한전은 8월 말부터 호남지역 변전소도 '계통관리변전소'로 신규 발전소 신규 계통연계를 중단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호남지역은 태양광 발전소가 많이 들어서고 있는 지역으로 한전의 계획대로라면 2032년까지 이 지역엔 신규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설 수 없다.
-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전환을 더 빠르게 추진해야 하는 시점에서 이와 같은 일은 전력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이 목표에 역행하는 일이다.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데이터센터, 반도체 단지 등 대규모 전력 수요처를 비수도권으로 옮기고, 지역별 전력수요의 적정 용량을 상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수도권 데이터센터 신설에 대한 모라토리엄 선언, 갈수록 늘어나는 전력수요에 대한 에너지 충족성(energy sufficiency) 검토에 기반해 전력망 확충 계획이 다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 7. 매년 반복되는 전력계획 수립 투명성·민주성 문제, 제도 개선 필요

- 2002년 제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20여 년 동안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의 폐쇄성과 비민주성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 앞서 언급했던 전력수요 예측의 근거, 실무위원회 구성의 편향성, 기본적인 회의록조차 남기지 않는 절차적 문제,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공청회 등의 문제가 대표적이다.
-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단지 발전소 건설계획이 아니라, 탄소중립 실현의 주요한 지렛대이다. 이 계획에 영향을 받는 이들은 단지 전력 업계 관계자뿐만 아니라 발전소와 송·변전 시설 인근 지역주민, 기후위기에 고통받는 국민까지 매우 포괄적이다.
- 그런데도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절차는 그동안 개선되지 않았다. 일반 국민은 물론이고 국정을 감시하고 지적할 의무를 갖고 있는 국회에조차 관련 자료는 제출되지 않고 있다.
- 이에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의 수립 근거와 회의록을 공개하고 형식적인 공청회의 횟수와 지역을 늘려 실질화하는 방안들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전력수요 전망을 둘러싼 논란의 경우, 제3자 검증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객관성과 민주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